

중학교 신입생에 스마트기기 지급… 온·오프 수업 늘린다

교실 속 디지털 기기 이용 생활화
논술형 수능 대비… 토론 수업 확대
10개국 60개교와 공동 토론 수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미래교육 모델'을 발표했다.

/뉴스

상' 태블릿 지급… 이후 초·고교로 확대

교육청은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 스마트기기를 1대씩 지원해 이를

이 3학년이 되면 모든 중학생에게 스마트기가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실 속 디지털 기기 이용은 더욱 생활화된다. 교육청은 보급한 스마트 기기와 디지털교과서, 교육용 콘텐츠 등을 연동해 일상적인 학습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은 자유로운 학습용 기기 활용법과 정보 윤리 등을 익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마트기기에 유해 사이트·앱을 차단하고 사용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설치한다.

2022년 서울 내 중학교 1학년 6만 9000여 명과 중학교 교직원 1만 8000여 명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601억원이다. 2024년 까지 중학교 보급을 완료하고 이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도 확대한다는 방

침이다.

◆논술형 수능 대비 '토론수업' 강화… 외국 학교와 국제 공동 토론수업 추진

서울시교육청은 토의·토론을 활성화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토의·토론 교육을 희망하는 초·중·고 전체 학교에 평균 300만원씩을 지원해 독서 기반 토의·토론수업과 사회 현안 프로젝트 학습 등이 이뤄지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토의·토론 기반의 쓰기 수업·평가 모델 'CLASS'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토의·토론 교육 활성화 방안은 다가오는 논·서술형 수능 시대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제 공동 토론수업도 추진한다. 이

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2억 6000만원을 들여 통·번역 프로그램과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서울 학생들과 외국 학생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말하며 실시간으로 공동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서울 관내 초·중·고 6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수업을 실시한다. 국제 공동 토론 시범수업에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대만, 일본, 러시아 등 해외 10개국의 60개교 학생들이 참여한다. 2023년에는 이를 확대해 관내 110개 학교가 국제 공동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2024년부터는 모든 중학교로 늘릴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hsj@metroseoul.co.kr

서울시, 해외 기업 유치에 2418억 투입

글로벌 금융기관·기업 유치 나서
인베스트 서울센터 기능·역할 강화
유치 기업에 임대료 등 원스톱 지원

서울시는 해외 금융기관·기업 유치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약 2418억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거듭나고자 글로벌 금융기관과 기업을 서울로 끌어들이기 위한 투자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해외 투자 유치를 전담으로 하는 '서울투자청' 출범을 위해 시는 내년 서울 산업진흥원 내 인베스트 서울센터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오는 2024년 이

를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울투자청을 통해 유치한 기업에 사무공간부터 임대료, 기업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금융기업에 임대료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서울국제금융오피스'도 2022년 여의도에 추가로 개관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된다. 고용보조금은 5000만 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외국인투자자 역 지정시 임대료 지원을 현행 50%에서 최대 75%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코로나 이후 급부상한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기 위해 국내·외 펀테크 기업 지원과 인재양성에도 나선다. 여의도에 조성한 국내 최대 '서울핀테크랩'(핀테크스타트업 육성기관)에 이어 내년 마포에 '제2서울핀테크랩'의 문을 연다. 시는 서울핀테크랩과 청년취업 사관학교 등을 통해 매년 3000명의 현장형 인재를 길러낸다는 구상이다.

시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시계획과 연계해 외국인 학교 유치, 주거공간 공급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jk1@

아주대, '병원균 신속 검출기기' 기술이전

기술이전료 3억·경상기술료 확보

아주대학교 연구진이 개발한 '병원균 현장 신속 검출 기기 기술'이 관련 기업으로 기술이전됐다. 이번 계약으로 아주대는 기술이전료 3억원과 제품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확보했다.

아주대는 지난 4일 기술이전 협약식을 열고 식품 내 병원균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재귀반사법 기반의 식품 내 병원균 현장 신속 검사' 원천기술을 (주)블루비즈에 기술이전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재호·윤현철(응용화학생명공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교수팀이 연구개발한 원천기술은 식중독의 대표적 병원균인 대장균,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등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해당 신속 검사 기술이 상용화되면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아주대 연구팀은 "국내에서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약 2조 8000억원(GDP의 0.22% 수준)으로 추정되며, 식중독 발생률이 10% 감



지난 4일 열린 협약식에서 김용현 (주)블루비즈 대표이사(왼쪽)와 권용진 아주대 산학협력단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주대

소하면 약 28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며 "식품 내 병원균을 현장에서 신속도로 신속하게 검출하는 기술을 통해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줄이고, 여타 병원균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기술이전된 '병원균 현장 신속 검출 기기' 기술은 과기정통부의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R&D 사업' 나노기술 분야에 선정되어 앞으로 3년간 실용화 연구를 지원받는다.

/이현진 기자

순천향대

'공대 학술제·전시회' 개최

순천향대학교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교내 멀티미디어관에서 '제30회 공과대학 학술제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과대학 학술제 및 작품전시회'는 공과대학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과 실습 능력 배양을 통해 전공에 대한 이해도 및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공과대학 학생회 주관으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제30회를 맞아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를 비롯한 11개 학과에서 총 249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특히 자동 좌석 오픈 시스템, 다중 사용자 체증 주적 시스템, 길 안내 자율주행 로봇, 손가락 관절염 예방 및 재활 의료기기, 음성 인식 기반 헬스케어 시스템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전공과 주제의 혁신적 아이디어 작품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정보통신공학과 신진우 학생 외 5명 (지도교수 박동규)은 '음성 인식 기반 헬스케어 시스템'을 고안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현진 기자

학교 주변 방역 위한 현장 점검 확대

이 낮은 10대 연령대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급 단위로, 교실 이동수업이 있는 중·고교는 학년 단위로 등교가 중단되고 접촉자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8일 수능과 22일 수도권 전면 등교에 대비해 학교 주변 방역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서울 초·중·고교도 22일부터 전면등교를 시작한다. 다만 과대·과밀학교는 의견수렴에 따라 초 3~6학년은 4분의 3 이상, 중고는 3분의 2 이상 등교가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내년부터 5년간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 하후상박형 소득보장 제도

분의 절반을 3년간 매월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5년간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서울시가 일정 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 제도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이하와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 소득 부족

/김현정 기자